

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과 상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함
(안 제7조제1호, 안 제7조제3호)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

3. 근거법규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3. 3. 4 ~ 2013. 3. 25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남외동 1010-1번지”를 “해오름2길 50(남외동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질환 또는 정신질환”을 “질환”이라 하고, 같은조제3호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다만,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중구 <u>남외동 1010-1</u> 번지에 둔다.	제2조(위치) ----- ----- <u>해오름2길 50(남외동)</u> -----.
제7조(이용의 제한) (생략) 1. 전염성 <u>질환 또는 정신질환</u> 이 있는 자 2. (생략) 3.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자 4. (생략)	제7조(이용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질환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다만,</u> <u>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</u> <u>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.</u> 4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) ① (생략) 1 ~ 2 (생략)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<u>의한</u> 수급 자 4 (생략)	제9조(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 1 ~ 2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따른</u> ----- - 4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<u>아니한</u> 사항은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7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4. 3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4. 4.(목)
- 위원회심사 : 2013. 4. 11.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과 상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함
(안 제7조제1호, 안 제7조제3호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변경

4. 근거법령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권수)

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,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